

북한경제 연구 발전방향

장형수 |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 hzang@hanyang.ac.kr

북한경제 연구도 다른 연구분야처럼 시류에 따라 그 초점이 이동하고 있다. 북한경제에 대한 연구가 처음으로 큰 관심을 끌었던 때는 동서독통일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난 시기였다. 이는 자연스럽게 ‘남북통일 이후 통합방안 연구’라는 유행을 창조했다. 남북관계가 지금보다 훨씬 나았던 시기에는 대부분의 ‘북한경제전문가’들이 ‘남북 경제협력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머리를 짜냈다. 북한이 2016년 들어 두 차례의 핵실험을 연이어 하면서 한국 정부 등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전개에 따라 ‘대북제재가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같은 연구주제들이 근래에 큰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런데 이처럼 시류를 타는 연구주제에 제대로 된 해답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북한경제 연구가 충분히 되어 있어야만 한다.

북한경제 연구도 다른 연구와 마찬가지로. 모든 과학적인 연구에 적용되는 방식을 따라 접근하되 한반도의 특수한 측면을 일정 부분 고려하면 된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북한경제의 각 부문별 현황 파악이 북한경제 연구의 출발점이자 기본이다. 무연탄 등 광산물 수출 기제에 대한 연구가 축적되어야 대북제재의 경제적 영향도 파악할 수 있다. 북한의 광산물 수출을 이해하려면 중국의 대북 투자를 분석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중국의 대북 중장비 수출을 살펴봐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북한경제와 관련된 공식적인 통계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근 시일 내에 북한 당국이나 외국 기관에서 이를 만들어 줄 것 같지는 않다. 향후 북한경제 연구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북한경제 관련 통계 작성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한다. 실제로 그동안 상당수 북한경제 연구자들의 노력으로 북한경제의 현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들이 다수 생산되었다.

IMF에서 작성하는 국가별 거시경제통계는 크게 국민소득계정, 국제수지, 중앙은행계정,

중앙 및 지방 정부 재정수지로 구분된다. 국민소득(생산)과 국제수지(외화수급)를 추정하는 것은 모든 국가경제 연구의 핵심이자 기본 중의 기본이다. 북한의 생산과 국민소득에 대한 통계는 한국은행이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작성·발표하고 있다. 이 통계는 일부 디테일한 측면에서 논란이 있긴 하지만 큰 그림에서 볼 때 북한경제의 현황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북한의 국제수지(외화수급) 중 무역수지는 중국 등 북한 무역상대국의 유엔 무역통계 재검토를 통해 상당한 현황 파악이 가능하다. 그런데 국제수지 중 경상수지와 자본수지, 특히 중국, 싱가포르, 이집트 등의 대북 투자나 북한의 대중 투자 등에 대한 연구가 아직 부족하다. 북한의 중앙은행계정과 재정수지는 아직 미지의 영역이다.

북한의 농업, 광업,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 등 산업별 현황은 큰 그림에서 윤곽을 잡을 수 있다. 이는 한국은행과 관계기관에서 추정하고 있는 거시통계도 있지만, 최근 북한경제 연구자의 다수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북한경제의 시장화 관련 연구의 축적에 따라 북한 서비스업 동향을 미시적으로 추정하는 연구 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미시적인 추정 결과들을 실제로 거시통계와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는 아직 해답이 나오지 않고 있다. 한편, 북한경제에 대한 통계가 부족하다 보니 그 대안으로 탈북민 설문조사를 통하여 북한경제의 현황을 파악해 보려는 시도가 많다. 그런데 탈북민 설문조사는 그 한계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탈북민 설문조사를 이용한 시장화 관련 연구에서 설문조사 편익(bias)을 제거 또는 완화하는 방안 모색에 대한 북한경제 연구계의 치밀한 노력이 기대된다.

일반적인 국가(지역)에 대한 경제연구는 경제현황 파악과 그 국가(지역)와의 경제협력 방안 연구로 구성된다. 경제협력은 개발협력과 교역·투자 협력으로 나눌 수 있다. 이 두 가지 형태의 남북 경제협력은 그 성격상 구별되어야 한다. 개발협력은 양자 간 공적개발원조(ODA)와 다자간 국제개발은행의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지원의 형태로 공여되며, 교역·투자 협력은 '상호 혜택을 볼 수 있는' 상업적 거래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국제사회에서 준용되는 개발협력의 개념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못하여 남북 경제협력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사례가 없지 않았다.

그런데 남북 경제협력 연구 중 일부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북한경제 개발방향이나 방안을 논의하면서 현실정보보다는 바람직성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바람직한 북한 개발방향은 정치적 통일이 이루어진 이후에 실현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최소한 통일 이전이라도 북한 지역에 우리와 매우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정권이 탄생한 이후에야 가능해진다. 이러한 이상적인 상황은 아직 현실이 아니다. 비록 우리와 대화·협력은 하지만 우리가 완전하게 통제하지 못하는 정권이 북한에 존재하는 경우의 남북 경제협력

연구는 우리의 상대방이 있다는 현실을 바탕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향후 남북 경제협력이 재개되는 경우 북한경제 연구방향도 당연히 현실적인 방향으로 가야할 것이다. 이때가 되면 북한은 국제사회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은 가시화되고 북한경제 개발에는 우리만이 아닌 국제사회의 경쟁자들도 뛰어들 것이다. 그동안 남북 간에 진행되었던 경제협력이라는 틀은 새로운 틀로 바뀔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개발협력과 교역·투자 협력의 두 축에서 모두 이전과는 다른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국제사회로 나가기 위해서 북한은 개발협력과 교역·투자 협력 관련 국제관례를 따르는 부담을 감수해야 하지만 그 대가로 많은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때가 되면 우리는 남북 경제협력이 북한의 국제경제 관계의 중심에 설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고심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특정 지역에 관한 경제연구에 적용되는 일반론 외에도 북한경제 연구에는 남북통일 관련 연구라는 특수성이 존재한다. 물론 이 분야 연구방식에도 지역경제 연구의 일반론이 적용되어야 한다. 1990년대 초 동서독통일이라는 역사적 사건이 촉발한 남북통일 관련 연구는 통일 이후 정치·경제·제도를 어떻게 통합하는가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동안 상당히 많은 연구가 축적되었지만 아직 보완되어야 할 분야도 적지 않다. 특히 통일과정에 반드시 포함되는 남북 당국 간 협의·협상에서 논의되어야 할 주요 이슈와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통일 임박 시의 경제 안정화 정책과 통일 초기의 미시·거시 경제정책 등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남북통일 당시의 우리의 경제력은 동서독통일 당시의 서독보다 더 열악한 상황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래서 향후 남북통일 임박 즈음 북한주민들의 통일에 따른 경제적 개선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키면서도 통일한국의 경제성장 동력을 유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지금부터 고민해야 한다. 이 연구의 중심은 남북통일 이후 남북 간 인구이동을 물리적으로 억제하지 않고도 경제적 유인의 제공을 통하여 북한주민의 잔류를 유도하는 통일방안에 대한 연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북한경제 연구도 수십 년의 역사를 가지게 되었다. 사실 북한경제 연구는 다른 지역 경제연구와 마찬가지로 북한경제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며, 북한에 대한 정보가 제한되어 있어서 이를 위해서는 적지 않은 초기 투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의미 있는 북한경제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해서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 그동안 이러한 단점이 부각되면서 새로이 북한경제 연구분야로 진입하는 연구자의 숫자가 많지 않았었다. 그래서 1998년의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북한경제 연구를 포기하고 다른 인기 경제학 분야로 연구분야를 바꾸는 소위 ‘탈북자’도 적지 않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경제 연구는 (‘자발적 입북자’로 불리는) 새로운 연구자의 진입이 계속되고 있다. 이제 북한경제 연구도 다른 연구처럼 각 분야별 전문가가

필요하다. ‘북한경제 전문가’가 아닌 북한시장화 전문가, 북한투자 전문가, 북한개발협력 전문가, 북한거시경제 전문가 등이 많이 나타나야한다. 두루뭉술한, 일반인이 이해하기 좋은, ‘약간의 과장’이 가미된, 흥미로운 북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런 “북한경제 전문가”는 몇 명만 있으면 될 것이다. 이제 북한경제 연구는 각 분야별로 전문성을 축적한 연구자들이 이끌어 가는 풍토를 우리가 조성해야 할 것이다.